

경제부총리 특별초청
중견기업 CEO 오찬강연회

중견기업 정책과제

2022. 9. 16

목 차

1. 조특법 시행령 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개선	1
2.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	3
3.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...	5
4.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당기분)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...	7
5. 상속세율 인하	9
6.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확대	11
7.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	13
8. 근로시간제도 개선	14
9.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	15
10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	16
11.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견기업 참여 허용	18
12. 국가 R&D 지원체계 개편	19
13. 중견기업 도약지원펀드 조성을 위한 정부재정출자 ...	21
14.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합리적 개선	23
15. 중소·중견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	25

□ 관련법령
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, 제9조

□ 현 황

- R&D,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 지원이 중견기업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으로 한정

<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>

중견기업 매출액 범위	세제지원 내용
5천억원 미만	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, 특허보세구역 특례, 가업상속 상속세 연부연납
4천억원 미만	가업상속공제,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
3천억원 미만	-(R&D·투자 등) 통합투자세액공제,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, 신·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경감,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, 기술이전 세액공제 등 -(고용) 고용증대세제, 근로소득세액공제,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,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, 경력단절 여성·육아휴직 복직자 재고용 세액공제,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세제지원 등 -(기타)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,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, 수출 중소·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

□ 문제점

- 조특법은 각종 세제지원을 기업규모별(대·중견·중소기업)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, 이 중 중견기업에 대해 매출액 상한 기준(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)을 두어 중견기업의 세부담을 증대시키고 성장을 저해

-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각종 지원이 축소되어 애로를 겪는 상황에서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 대해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제지원을 재차 축소하여 성장사다리의 단절을 심화

*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요인 : 조세혜택 54.3%, 금융지원 21.3%, 공공조달 지원 10.3%, 중소기업 적합업종 9.1%, 기타 5.2% 順(중견련,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)

- 실제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매출액 3천억원~5천억원 구간에서 매출액·영업이익·연구개발비 등 주요 경영지표에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어 성장 정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남

< 매출액 규모별 중견기업 주요 경영지표 증가율 >

매출 규모	기업 수	매출액	영업이익	자산총계	연구개발비	수출액
1천5백억원 미만	594개	8.67%	7.86%	6.29%	3.52%	4.85%
1천5백억원~3천억원	674개	-0.76%	-7.38%	3.51%	4.09%	-0.09%
3천억원~5천억원	266개	-1.85%	-12.51%	2.56%	0.32%	-5.33%
5천억원~1조원	173개	-0.23%	-7.14%	4.50%	5.42%	-0.50%
1조원 이상	98개	-0.49%	-0.44%	5.33%	2.27%	-7.28%
전 체	1,805개	0.26%	-4.41%	4.49%	3.11%	-3.37%

* '17년~'20년 재무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규모 중견기업 1,805개사를 대상으로 3년간의 경영성과를 항목별로 비교(중견련)

- 현행 조특법령에서 동일 기업군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지원을 차별하는 것은 중견기업이 유일하며 이는 기업 간 조세형평에 위배
- 대기업-중견기업 간 경영실적 격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분류하는 것은 과도

* 대·중견기업 경영실적(2020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및 2020년 기업경영분석)

- ① 매출액 : 중견기업 770조원, 대기업 2,303조원 ⇒ 3.0배
- ② 영업이익 : 중견기업 37조원, 대기업 111억원 ⇒ 3.0배
- ③ 자산총액 : 중견기업 989조원, 대기업 3,676조원 ⇒ 3.7배

- 중견기업 세제지원 범위 기준을 개선하여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, ESG 등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도모

□ 건의내용

- 조특법 시행령 상 중견기업 세제지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
- (현행)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(*R&D 세액공제 5천억원 미만)
⇒ (건의) 전체 중견기업

□ 관련법령

-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, 제28조의2, 제28조의3

□ 현 황

- 사업용 유형자산(일부 자산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)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 10%, 중견 3%, 그 외 기업 1%를 법인세에서 공제*

*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: 중소 12%, 중견 5%, 그 외 기업 3%

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: 중소 16%, 중견 8%, 그 외 기업 6%

- 해당 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3%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(기본공제의 2배 한도)

□ 문제점

- 수요부진, 불확실한 경기전망 등으로 인해 중견기업의 설비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, '22년에도 감소세가 여전할 것으로 나타나 투자를 유인할 대책 마련이 시급

<기업 규모별 설비투자 규모 및 증가율 추이>

구 분	금액(조원)					증가율(%)			
	2018	2019	2020	2021	2022(계획)	2019	2020	2021	2022(계획)
대 기 업	119.3	123.6	133.3	148.3	155.6	3.6	7.8	11.3	4.9
중견기업	28.2	24.6	24.1	23.8	23.3	△12.7	△1.9	△1.2	△2.4
중소기업	20.2	18.0	9.0	8.2	8.1	△11.2	△49.9	△8.7	△1.2

* KDB산업은행, 2021년 설비투자계획조사

- 또한,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, ESG경영 확산 등으로 에너지·환경·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제지원이 축소되어 비용부담 가중으로 인해 투자 시기가 늦춰질 우려

*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주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변화 :

[안전시설] (前) 중소 10% 중견 5% 그 외 1% → (後) 중소 10% 중견 3% 그 외 1%

[환경·근로자복지증진시설] (前) 중소 10% 중견 5% 그 외 3% → (後) 중소 10% 중견 3% 그 외 1%

[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] (前) 중소 7% 중견 3% 그 외 1% → (後) 중소 10% 중견 3% 그 외 1%

-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각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

○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중견·대기업은 세액공제, 중소기업은 정책금융을 가장 선호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시 중견기업의 정책 만족도가 특히 클 것으로 기대

* 기업규모별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(KDB산업은행, 설비투자계획조사) :

[대기업] 세액공제 55.8%, 정책금융 29.2%, 규제 완화 15.0% 順

[중견기업] 세액공제 48.4%, 정책금융 39.9%, 규제 완화 11.7% 順

[중소기업] 세액공제 41.9%, 정책금융 44.9%, 규제 완화 13.2% 順

- 또한, 통합투자세액공제 개편('20년) 이후 중소·중견기업 공제율 격차가 일괄 7%로 증가(개편 전 투자시설별 1~5%)함에 따라 지원절벽이 심화되어 이를 완화하고 중소→중견기업 성장을 유도할 필요

*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요인 : 조세혜택 54.3%, 금융지원 21.3%, 공공조달 지원 10.3%, 중소기업 적합업종 9.1%, 기타 5.2% 順(중견련,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)

□ 건의내용

○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

- (현행) [일반] 중소 10%, 중견 3%, 대 1%, [신성장] 중소 12%, 중견 5%, 대 3%
⇒ (건의) [일반] 중소 10%, 중견 7%, 대 3%, [신성장] 중소 12%, 중견 9%, 대 5%

□ 관련법령

-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9조

□ 현 황

- 기업이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중소기업 30~40%, 중견* 25~40%, 그 외 기업 20~30%를 법인세에서 공제('24.12.31까지)

*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기업

□ 문제점

- 정부는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, 미래차 등 신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·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하여 R&D 세제지원을 강화

* 신성장·원천기술 지정 추이 : ('19년) 11개 분야, 173개 기술 → ('20년) 12개 분야, 223개 기술 → ('21년) 12개 분야, 235개 기술 → ('22년) 13개 분야, 260개 기술

- 그러나, 신성장·원천기술 R&D 세액공제는 중견기업 지원대상을 코스닥 상장기업*으로만 제한하여 중견기업의 대다수(92.5%)가 대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중견기업 구간 적용이 어려운 상황

*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수(비중) : 419개사(7.5%)
(통계청, 2020년 중견기업 기본통계)

<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활용 현황('19년)>

구 분	중소		중견		일반	
	금액	비중	금액	비중	금액	비중
신성장·원천기술 R&D 세액공제	625억원	11.1%	249억원	4.4%	4,751억원	84.5%
일반 R&D 세액공제	19,971억원	72.4%	2,228억원	8.1%	5,377억원	19.5%

* 기획재정부, "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 :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", '21.9월

- 신성장·원천기술에 투자하는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여부 및 상장시장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,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려움
- 조세특례제한법 내 세액지원 중 상장 시장을 요건으로 하여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는 신성장·원천기술 R&D 세액공제가 유일
 - * 조특법 제5조(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)는 신규 상장 중견기업에 대해 추가로 공제하였으나 상장 시장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지 않았으며,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인해 상장 여부에 대한 제한도 삭제된 상황
-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성장·원천기술 R&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확대하여 제도 활용 실익을 높이고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
 - * 유사입법례 : 중견기업 기술력 향상 및 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'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(조특법 제10조)'는 중견기업 지원대상을 매출 5천억원 미만으로 적용

□ 건의내용

-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
 - (현행) 매출 5천억원 미만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⇒
 - (건의)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

□ 관련법령

-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

□ 현 황

- 기업이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을 제외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사용한 비용의 일부*를 법인세에서 공제

* 당기분방식 : 중소기업 25%, 중견기업 8~15%, 대기업 0~2%

□ 문제점

-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감소세이나 후발 신흥국과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, 우주·항공, ICT 등 일부 신산업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

* 분야별 기술수준('20) :

[한국] 전체 80.1, 우주항공·해양 68.4, 생명·보건의료 77.9, 에너지·자원 80.2, ICT·SW 83.0

[중국] 전체 80.0, 우주항공·해양 81.6, 생명·보건의료 78.0, 에너지·자원 81.6, ICT·SW 85.7

<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>

구 분	한국		중국		일본		EU		미국	
	'18	'20	'18	'20	'18	'20	'18	'20	'18	'20
기술수준(%)	76.9	80.1	76.0	80.0	87.9	87.3	94.8	95.6	100.0	100.0
기술격차(년)	3.8	3.3	3.8	3.3	1.9	2.0	0.7	0.7	0.0	0.0
기술수준 그룹	추격	추격	추격	추격	추격	추격	선도	선도	최고	최고

*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2020년 기술수준평가, '21.4월

-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중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80.3%*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 민간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민간기업 중심의 R&D 지원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

* 주요국 연구개발비 중 기업체 연구개발비 비중(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2019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) : 한국 80.3%, 미국 72.6%, 일본 79.4%, 독일 68.9%, 프랑스 65.4%, 영국 67.6%, 중국 77.4%

- 한편, 중견기업은 대·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설비투자과 고용이 위축*된 상황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

* 중견기업 설비투자/ 평균 신규 채용 추이(중견기업 기본통계) : ('16년) 23.2조원 / 56.8명 → ('18년) 24.2조원 / 40.4명 → ('20년) 19.0조원 / 46.2명 → ('22년 계획) 14.5조원 / 34.4명

<중견기업 R&D 투자 추이>
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 계획
R&D 투자금액(억원)	78,224	77,213	78,171	81,106

* 중견련, 중견기업 기본통계

- 그러나,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*가 연차에 따라 급격히 축소되어 연구개발 투자 확충이 용이하지 않음

* 중소기업 25% → 중견 1~3년차 15% → 중견 4~5년차 10% → 중견 6년차 이상 8%

- R&D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중소→중견 성장사다리 구축 및 중견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촉진하고, 민간 중심의 R&D 투자 기반 마련

-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 5% 상향 시, 매년 8조 8,481억원의 생산을 유발하고, 취업유발인원 및 고용유발인원이 각각 138,187명, 99,322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

* 한국재정학회,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, '19.2월

□ 건의내용

-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기분방식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
 - (현행) 중소기업 25%, 중견기업 8~15%, 그 외 기업 최대 2% ⇒ (건의) 중소기업 25%, 중견기업 13~20%, 그 외 기업 최대 2%

□ 관련법령

-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(50%)은 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으로,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승계보다 매각을 고려하는 상황 발생

<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>

세율	국가	세율	국가	세율	국가
55%	일본	30%	벨기에, 독일	10%	아이슬란드, 터키
50%	한국	25%	칠레	7%	폴란드, 스위스(칸톤 레벨)
45%	프랑스	20%	그리스, 네덜란드	4%	이탈리아
40%	영국, 미국	19%	핀란드	0%	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, 호주, 오스트리아, 캐나다, 에스토니아, 이스라엘, 멕시코, 뉴질랜드, 노르웨이, 포르투갈, 슬로바키아, 스웨덴, 헝가리, 체코, 라트비아, 콜롬비아, 코스타리카
34%	스페인	15%	덴마크		
33%	아일랜드	14%	슬로베니아		

* 국회입법조사처,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, '21.10.1

-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'20년 상속세액은 3조 9,042억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157%가량 증가했으며, 전체 세수 대비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

* 상속세액 및 세수 비중(억원, %): ('10) 12,028, 0.72 → ('15) 19,437, 0.93 → ('20) 39,042, 1.30

-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

<OECD 회원국 상속세 비교>

상속세 유지 국가(23개국)	상속세 폐지 국가(15개국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산취득세(19) : 벨기에, 칠레,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그리스, 헝가리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일본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네덜란드, 폴란드, 슬로베니아, 스페인, 스위스, 터키 ○ 유산세(4) : 덴마크, 대한민국, 영국, 미국 * (배우자 및 직계비속 비과세) 슬로베니아 (배우자 및 직계가족 비과세) 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, 슬로베니아, 헝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본이득세(4) : 호주, 캐나다, 뉴질랜드, 스웨덴 ○ 추가소득세(3) : 라트비아, 콜롬비아, 코스타리카 ○ 비과세(7) : 오스트리아, 체코, 이스라엘, 멕시코, 노르웨이, 슬로바키아, 에스토니아 ○ 인지세(1) : 포르투갈(직계가족 면제)

* 국회입법조사처, 「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」, '21.10.1

□ 건의내용

- 직계가족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(OECD 평균 15%) 또는 자본이득세 (승계취득가액 과세)* 도입

* 상속가액에 대해 상속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,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방식

□ 관련법령

-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함

*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

-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기업승계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전·사후 요건 등이 완화*되고 있는 추세

*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,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(기재부, 2022년 세제개편안, '22.7월)

-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업종 자체가 한정*되어 있어 일정 기간 이상 가업을 영위해왔음에도 기업승계 시 가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

* (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)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 업종

-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16개(대분류 기준), ②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17개

<현장 애로 사례>

- ① A사는 인력도급 관련 사업을 40년 이상 영위하며 경비, 청소, 시설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타사업체와의 도급 또는 위탁계약을 통해 인력을 투입하여 생산라인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음(표준산업분류상 "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74~75)"에 해당)
- 그러나 주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"소독,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(74220)"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(단, "산업설비,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(74212)", "고용알선업(75110)" 등 일부 부업종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)으로, 유사·동종사업("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(7421)", "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(751)" 등)을 영위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에 어긋남
- ② 리조트에 속해있는 골프장은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가업에 해당하지만, 일반 골프장의 관광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

- 동종·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표준산업분류코드 또는 개별법을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인정 여부가 달라져 타당성 및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
- 특히, 광업, 제조업, 건설업과 같은 전통산업은 대분류 내 전체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, 서비스업은 중분류, 세분류 등으로 업종을 세분화하여 한정된 업종만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인정

<제조업-서비스업 관련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예시>

표준산업분류(대분류 기준)	가업 해당 업종
광업(05~08)	광 업 전체
제조업(10~33)	제조업 전체 (단, 직접생산제품이 아닌 경우 등에 한해 세부요건 충족 필요)
건설업(41~42)	건설업 전체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70~73)	연구개발업(70), 광고업(713),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(714) 등 5개 업종
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74~75)	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(7421),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(751),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(7531) 등 7개 업종
교육서비스업(85)	유아 교육기관(8511), 사회교육시설(8564) 등 4개 업종

- 4차 산업혁명, 탄소중립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세제·금융·재정 등 지원 제도의 차별을 해소하고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「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」 입법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가업을 폭넓게 정의할 필요

*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(120대 국정과제, '22.7월)

-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갈 백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이 중·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

□ 건의내용

-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
- 전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제외 업종*만 별도 규정

*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

□ 관련법령

-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,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금전, 유가증권, 토지 등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*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나, 비상장주식은 담보에서 제외되어 비상장사는 연부연납 제도 활용에 애로

* 금전, 유가증권, 납세보증보험증권, 납세보증서, 토지, 건물, 공장재단, 광업재단, 선박, 항공기, 건설기계 등

- 비상장 중견기업(83.4%)*이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담보 마련을 위해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게 되어 경영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

* 중견기업 현황('20년말 기준) : **비상장 4,607개(83.4%)**, 코스피 463개(8.4%), 코스닥 452개(8.2%), 코넥스 4개(0.1%)

- 비상장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납세담보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낮은 환금성으로 인한 부담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조세 정책의 일관성 결여

-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가능한 것에 착안하여 환가성에 대한 평가 및 신뢰가 있는 기업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

* 기획재정위원회 송병철 전문위원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(홍석준의원안, 의안번호 제2104118호)

□ 건의내용

- 기업승계 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주52시간제 시행 후 관련 규제를 다소 완화*했으나, 여전히 도입요건이 까다로우며 중소·중견기업은 인건비 상승·인력난 등으로 경영부담 가중
 - * [탄력근로제도] 단위기간 확대(3월→6월), 도입요건 :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
 [선택근로제도] 정산기간 확대(1월→3월(연구개발업무)), 도입요건 :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
 [특별연장근로] 인가사유 확대(재해·재난→돌발수습·업무량 폭증 등 추가) 및 기간확대(연 90일), 사업장 단위 인가
- 또한 직무별·업종별 특성이 반영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부작용 발생
 - 계절적 특수 등 일시적 생산 급증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일부 업종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어려워 근로시간단축에 한계
 - 다품목·소량생산 기업은 품목별 납기대응을 위해 개인별 연장근로가 필요하나, 사업장 단위로 허가하고 있어 제도 활용에 한계
 -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운 R&D 직무는 근로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나 획일적 규제로 R&D·신제품 개발 등이 지연되어 경쟁력 약화
- 4차 산업혁명, 디지털화,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근로시간제 개선 필요

□ 건의내용

-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선
 -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(現 6月→ 案 1年) , 도입요건 완화(근로자대표 서면합의 → 개별근로자 합의)
 -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(現 1月(연구개발업무 3月) → 案 6月) 및 도입요건 완화(근로자대표 서면합의 → 개별근로자 합의)
 -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 개선(사업장 → 근로자)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제조업 기준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업에 한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
- 중견기업 중 지방소재기업과 근로환경이 열악한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상황
 - * 중견기업 제조업 신규채용 애로사항 : 적합한 인재부재(44.8%), 지방소재(19.9%),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(15.5%) 순으로 조사(중견련,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)
 - 특히, 뿌리산업은 주력산업의 원천기술로 활용됨에도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신규 인력확보가 어렵고 직원의 고령화로 기술단절 우려
 - * 뿌리기업 : 주조·금형·소성가공·용접·표면처리·열처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('20년 결산 기준 제조업 중견기업 중 지방소재 기업은 985개사이며, 뿌리기업은 301개사임)

□ 건의내용

- 지방 소재기업 및 뿌리 기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

□ 관련법령

-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, 동법 시행령 제27조

□ 현 황

- 청년, 60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% 감면(청년 취업자는 5년간 90%) ('23.12.31까지,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)

□ 문제점

- 새 정부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는 역행적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중견기업법을 상시화하는 등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여 혁신생태계를 복원하는 정책 과제를 발표

* "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"(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,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 과제 중 17번, '22.5월)

- 조세특례제한법 내 대다수의 고용 관련 세제지원의 역진적 구조는 고용 창출 여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규모만으로 지원을 축소하여 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

- 특히, "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" 등의 일부 제도는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,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→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지원이 단절

* 중소→중견 성장시 배제되는 고용 관련 세제지원 :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,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,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

-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이 필수적이나 초기 중견기업(매출액 3천억원 미만)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대졸초임의 66.3%^{*}에 불과하여 구인이 어려운 상황

* [대기업 대졸초임] 5,084만원(경총, 우리나라 대졸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 '21.10월)
[초기 중견기업 대졸초임] 3,372만원(중견연,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데이터를 가공)

- 실제로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규채용 애로사항 및 이직 원인으로 낮은 임금 수준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

* 중견기업 신규채용 애로사항 2순위 :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(16.4%),
중견기업 근로자 이직원인 1순위 : 낮은 임금수준(18.1%)

- 또한, 구직자의 제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은 타 기업군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아 인재영입 애로가 가중될 우려

* 기업규모별 제조기업 비중(통계청, '19년 결산 기준 영리법인 통계) :
중소기업 20.1%, 중견기업 38.5%, 대기업 20.7%

- 구직자의 중견기업 취업을 유인하여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,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지원할 필요

□ 건의내용

-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중소·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장기재직 및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 중이며, '21.9월부터 중견기업은 참여대상에서 제외

* (대상) '16년 중소중견 → '20년 중소중견(3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) → '21.9.8 중소

-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·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및 우수인재 확보에 상당한 기여

*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지원현황(고용부 보도자료, '21.8.26)

[가입청년 수] ('16년) 5,217명, ('17년) 40,170명, ('18년) 106,402명, ('19년) 98,572명, ('20년) 137,226명, ('21.7월) 91,749명

[가입기업 수] ('16년) 2,788개, ('17년) 18,268개, ('18년) 39,365개, ('19년) 41,255개, ('20년) 54,376개, ('21.7월) 42,095개

[근속비율] (1년 근속) 중기 재직청년 46.6%, 공제가입청년 78.6%, (2년 근속) 중기 재직청년 33.0%, 공제가입청년 67.3%

** 석·박사 가입 수 : ('16년) 74명, ('17년) 1,480명, ('18년) 4,326명, ('19년) 3,709명 (한국노동연구원, 「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실태 분석」, '20.2월)

- 중견기업은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로 여전히 채용 애로를 겪고 있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제외로 중견기업 인력확보 애로 가중 우려

* 신규채용 애로요인: 적합한 인재부재(48.7%), 낮은임금(15.7%), 지방소재(13.4%) (중견련,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)

□ 건의내용

- 중견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허용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중견기업의 국가 R&D 집행액은 매년 증가*하고 있으나, '20년 국가 R&D 예산 24.2조원 중 중견기업 집행액은 1.8조원(7.6%)*에 불과

* 중견기업 국가 R&D 집행액 : ('16) 0.7조원 → ('20) 1.8조원

** 과기부·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, '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('21.8월)

- 현행 국가 R&D 지원체계는 중소기업 우선 분배 방식과 경직적인 관리 관행* 등으로 국가 R&D 성과창출을 저해

* 예 : ① 기술 및 시장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당초 수립한 목표대로 과제 종료 시까지 수행, ②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참여 시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기관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사업 종료를 기피, ③ 사업기간 동안 연차 협약, 복잡한 신청서류 작성 및 성과보고대회 등 부수적인 행정업무가 과다

- 실제로 국가 R&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*하여 30조원에 이르지만 기술이전을 통한 R&D 성과 활용**과 사업화율***은 매우 저조한 상황

* 국가 R&D 예산(조원) : ('18) 19.7→('19) 20.5→('20) 24.2→('21) 27.4→('22) 29.8

** 공공연구소가 정부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비율은 '16년 60.3%에서 '20년 40.8%로 크게 하락(산업부 등, 2021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·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, '21.12월)

*** 국가 연구개발 과제 성공률이 99%에 달하는 반면 사업화율은 절반 수준(38.5%)에도 못미쳐 국가 R&D 과제 수행의 비효율성이 심각(김경만 의원실 자료, '21.10월)

- 비효율적인 국가 R&D 지원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여 민간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

- 국가 R&D 사업의 활성화와 성과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의 경제 기여도*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중견기업 국가 R&D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

* 중견기업 경제기여도 : 기업 5,526개사(1.4%), 매출 770조원(16.1%), 종사자 158만명(13.8%), 수출 931억불(18.2%) (2020년 중견기업 기본통계)

□ 건의내용

- 국가 R&D 지원체계를 기술력과 역량을 갖춘 기업이 R&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촉진형으로 재설계
 - 중견기업 매출수출고용 등 경제 기여도에 부합하는 규모로 R&D 예산 확대
 - 중견기업 전용 R&D 지원사업 확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 및 투자가 필요하나, 자체 역량만으로는 투자 수행 곤란
 - 중소·벤처 기업 전용 지원예산(11.2조원)에 비해 중견기업 전용 지원 예산(1,100억원)이 매우 취약한 상황
- 정부가 다양한 정책펀드를 운영 중이나 대부분 중소·벤처기업 육성에 중점*되어 있고, 중견기업 대상 투자는 상대적으로 과소
 - * 중기부 모태펀드, 금융위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부 펀드 주투자대상은 중소·벤처기업
 - 민간에서 기업 투자 중심으로 조성되는 펀드는 대기업이 주로 주도하며, 중견기업보다 기술 보유 벤처기업에 투자 집중
- 중견기업의 산업생태계 강화와 중소·벤처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목적의 중견기업 정책펀드 조성이 절실
 - 이에 정부에서도 기업 성장 단계 및 유형별 맞춤 지원을 위한 ‘중견기업 도약지원펀드 조성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함
 - * 대통령 공약(‘22.2월), 국정과제(‘22.8월)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, 산업부 장관 중견연 내방(‘22.6월) 시에도 정부와 중견업체가 함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임을 밝힘

□ 추진 계획

- (‘22년) 본격적인 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예산이 필요하나, ‘23년도 예산 출자를 받지 못해 민간자금 등으로 소규모 펀드 조성*
 - * 신규 정부 재정 출자 없이 중견기업 출자금 등을 활용하여 조성 계획하고 있으나, 한계 명확
- (‘23년) ‘23.上 예타심의 후 ‘24년도 펀드 정부예산* 신청 계획
 - * 정부 1,000억원 + 중견기업 1,000억원 + 민간자금 2,000억원 = 총 4,000억원 규모

□ 건의내용

- ‘중견기업 도약지원펀드 조성’은 대통령 공약(‘22.2월) 및 국정과제(‘22.8월)에 포함된 정책인 만큼 펀드 조성을 위한 정부재정출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(이하 경쟁제도)는 조달시장에서 특정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대·중견기업의 입찰참여 제한

* 213개 제품(632개 품목) 지정, 중기간 제품 연간 구매액 22.1조원('20년)

- '21년 신산업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확대 하겠다고 발표(중기부, “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”, '21.4.29)

- 경쟁제도 참여기업 및 제품구매액은 급증*했으나, 일부기업에 혜택이 편중되고 다수 품목이 반복 지정**되는 등 실효성 약화

* 참여업체(개): ('06) 3,429 → ('13) 19,840 → ('16) 23,336 → ('19) 27,096 → ('20) 29,493
제품구매액(조원): ('06) 2.1 → ('13) 15.7 → ('16) 17.4 → ('19) 20.6 → ('20) 21.9

** '20년 기준 611개 세부품목 중 531개(86.5%)가 경쟁제품으로 반복 지정

-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을 꺼리고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 발생

* '07~'15년 간 경쟁제품 참여기업 2만개 중 대·중견기업 성장 기업은 79개에 불과

- 조달시장만 존재하는 일부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은 대체시장이 없어 인력감축, 기업 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회귀

- 또한 신산업 품목 지정 확대는 중견·대기업의 사업기회 축소로 기술혁신 및 신산업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고 글로벌 경쟁력 저하 및 산업 발전 저해 우려

* 중견기업 신산업 추진 현황 : ('18)17.4% ('19)19.3% ('20)23.3%(중견련 '20년 중견기업 기본통계)

<현장 애로 사례>

- A사는 '18년 미래 신산업으로 ESS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해 '19년 상용화 추진 예정이었으나, '18년 ESS가 경쟁제품 지정 추진되면서 ESS 사업추진 보류 및 전면 재검토

- 특히 신산업 품목은 초기 시장형성 단계이므로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시장에서 납품실적(Track Record)가 필요하나, 중견기업은 신제품을 개발해도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어 수출 애로 발생

□ 건의내용
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졸업제(일몰제) 도입
- 업종전문화를 통해 중소→중견으로 성장한 기업은 조달시장 참여 허용
- 신산업 품목 지정 시 일정비율 중견기업의 참여 허용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세계적으로 ESG경영이 확산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, 에너지 절약, 폐기물 배출 등 환경 문제와 안전·보건 및 고용 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
- 또한 투자회사가 ESG 경영을 투자의 지표로 삼고*, 고객사의 ESG 경영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ESG에 소극적인 기업은 향후 투자 및 고객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

* '20년 블랙록은 전년 대비 ESG경영에 대한 주주관여가 대폭 증가(환경(E) 289%, 사회(S) 146%, 지배구조(G) 46% 증가(삼정KPMG, 삼정 인사이트 Vol.74, '21.2월))

- 중견·중소기업은 ESG경영 필요성을 인식*하고 있으나 인력·자본 등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, 특히 제조 수출중소·중견기업은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타격 예상

* 중견기업의 78.2%는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,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(37.6%), 공신력 있는 ESG 평가·공시 표준 마련(32.7%), ESG 관련 교육·컨설팅 지원(20.8%)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(중견련, ESG 경영 관련 중견기업계 의견조사, '21.6월)

- 중소·중견기업의 ESG경영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ESG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컨설팅 마련 등의 다양한 지원책 필요

□ 건의내용

- 환경·안전 등 ESG경영을 위한 시설 투자시 세제지원 확대
 - ESG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: 중소 15%, 중견 10%, 대 5%
- 중소·중견기업 ESG경영 도입을 위한 교육·컨설팅 지원 마련